

이달의 초점

청년의 복합 위기와 기본사회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격차와 청년정책 접근성

| 박윤경 |

청년 건강 현황과 과제: 취약청년 중심으로

| 김동진·이지영 |

청년 부채 현황과 채무조정제도의 정책과제

| 나원희 |

최근 청년층 고용 상황과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2022~2026)

| 함선유 |

청년의 고립·은둔 현황과 과제

| 노혜진 |

청년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청년복지 제도화 과제

| 김성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격차와 청년정책 접근성¹⁾

Unequal Starts: Labor Market Entry and Access to Youth Policy among
Young Adults with a Migration Background in South Korea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서는 이주배경 청년(19~24세)을 처음으로 정책 대상에 명시하였으나,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와 청년정책 접근성에 관한 실증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와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고, 이를 비이주배경 청년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 청년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65.5%로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보다 약 12% 높고, 월평균 소득은 약 45만 원 낮았다. 고용 불안정성은 중도 입국 청년에게서 특히 컸다. 정책 인지와 이용은 학교를 통해 안내되는 학업 관련 정책에 편중되어 취업·주거·창업 정책의 인지도는 대체로 20%에 미치지 못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개인 맞춤형 지원, 직업훈련 후속 연계, 이중언어 강점을 살린 취업 경로, 고급 한국어 교육, 이행 전환기의 생계·체류 지원의 공백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의 이주배경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2025, p. 2)의 2024년 이주배경

인구²⁾ 통계에 따르면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약 73만 8079명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다. 연령 구성을 보면 20~24세가 3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5~19세 17.7%, 10~

1) 이 글은 곽윤경, 나원희, 남윤재, 김주리, 변소연. (2025).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 및 재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외국인, 내국인(귀화·인지), 내국인(이민자 2세), 내국인(기타)의 합으로 산출된다(국가데이터처, 2025, p. 19).

14세 16.6%, 5~9세 16.3%, 0~4세 13.7% 순으로 나타났다. 20~24세 비중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이주배경인구의 무게중심이 학령기에서 노동시장 진입기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주배경 청년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이행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이주배경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 기회와 노동시장 진입에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한다면 그 불이익은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되어 세대 내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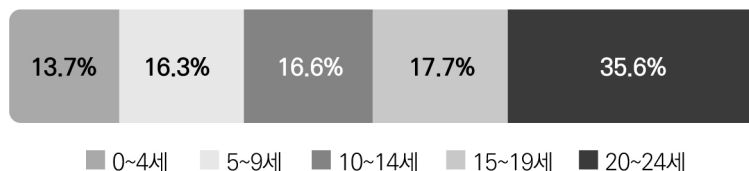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2월 확정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은 의미 있는 변화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은 복지 사각지대 개선 과제의 하나로 이주배경 청년(19~24세) 대상 한국 사회 초기 적응 지원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지원을 처음으로 명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5). 이는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에서 언급된 다문화배경 청년보다 확장된 개

념으로, 다문화가족 출신 자녀를 넘어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 청년으로 그 범위를 확장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이주배경 청년을 처음 주목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이들이 실제로 어떠한 노동시장 진입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기존 청년정책을 어떻게 인지하고 이용해 왔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선행 연구는 청년정책이 이주배경 청년을 제도적으로 배제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곽윤경 외, 2025; 곽윤경, 2026). 이 글은 그러한 논의를 실증 자료로 뒷받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 이주배경 청년은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 경험을 가진 청년을 말한다. 다만 이 글이 활용하는 조사 자료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표본틀로 하므로 실증 분석의 범위는 다문화가족 자녀인 국내 출생 및 중도 입국 청년에 한정된다. 외국인 가정 자녀 등 제2차 기본계획이 포괄하는 그 밖의 이주배경 청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글의 초점은 초

[그림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령별 구성비(2024년)



출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등록센서스 방식)", 국가데이터처, 2025. 12. 8., p. 12.

기 청년인 19~24세로,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 상한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이 명시한 지원 연령에 모두 부합하는 범위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들을 이주배경 청년으로 표기한다.

이 글은 여러 조사 자료와 심층 인터뷰를 활용한다.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는 2021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 패널 12차년도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비이주배경 청년과의 비교 준거로는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년 청년삶실태조사, 그리고 2021년 교육기본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글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의 자료는 조사 시점, 표본틀, 문항 구성이 서로 달라 두 집단 간 차이는 엄밀한 통계적 비교가 아니라 상대적 격차로 읽어야 한다. 아울러 중도 입국 청년의 표본 규모가 작아 해당 집단의 비율 추정치는 표집 변동에 민감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책 접근을 비이주배경 청년과 나란히 놓고 살펴본 자료가 그동안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분석은 탐색적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2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격차

가. 고용 안정성·임금·직종의 격차

이주배경 청년의 고용 안정성은 같은 연령대 비

이주배경 청년과 비교할 때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표 1). 전체 청년(19~34세) 취업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비율이 24.5%인 점을 고려하면, 초기 청년(19~24세)은 이주배경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초기 청년 내에서도 이주배경 청년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65.5%로,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53.6%)보다 약 12% 높았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의 비율 역시 이주배경 청년이 28.2%로,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41.6%)과 전체 청년(66.8%)보다 현저히 낮았다.

고용 불안정성의 격차는 임금 수준에서도 확인된다. 2022년 기준 이주배경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약 116만 원(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으로, 같은 해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161만 원, 청년삶실태조사)보다 약 45만 원 낮았다(곽윤경 외, 2025, p. 146). 이주배경 청년 집단 내부에서도 임금 분포는 양극화된 특징을 보였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100만 원 미만 구간 응답자의 40% 이상(50만~100만 원 24.1%, 50만 원 미만 19.8%)이 분포하는 한편 또래 평균 수준인 150만~200만 원 구간(24.4%)에도 상당수 몰려 있다(곽윤경 외, 2025, p. 147). 이는 임금 수준에서도 집단 내 이질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두 집단의 평균소득은 서로 다른 조사에서 산출되어, 이들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직종 분포는 종사상 지위만큼 격차가 뚜렷하지는 않다. 이주배경 청년은 서비스 종사자(37.2%),

[표 1] 종사상지위: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단위: %)

구분	이주배경 청년(1) (19~24세)	비이주배경 청년(2)	
		전체(19~34세)	초기 청년(19~24세)
소계	100.0	100	100
상용근로자	28.2	66.8	41.6
임시근로자	45.1	21.4	46.5
일용근로자	20.4	3.1	7.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0	1.9	0.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7	5.2	2.8
무급가족종사자	2.6	1.5	1.5

주: (1)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활용, (2) 경제활동인구조사 활용, 취업자 기준임.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최윤정 외, 2022,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2의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판매 종사자(19.7%), 단순노무 종사자(10.9%) 순으로 집중되어 있는데(곽윤경 외, 2025, p. 111~112),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 역시 서비스 종사자(37.3%)와 판매 종사자(13.8%)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단순노무 종사자(8.3%)도 적지 않다(정세정 외, 2025, p. 200). 이처럼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저숙련·불안정 직종을 거치는 것은 초기 청년기의 일반적 특성으로, 이주배경 청년만의 현상은 아니다. 다만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첫째, 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을 합한 비중은 이주배경 청년이 30.6%로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22.1%)보다 8.5% 높았다. 둘째, 사무 종사자 비중은 두 집단이 비슷하지만(이주배경 청년 15.6%,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 16.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은 이주배경 청년이 7.6%로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16.3%)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격차는 상위 직종으로의 진입이 두드러진다. 종합하면, 이주배경 청

년은 또래와 유사한 직종에서 일을 시작하지만 전문직 진입은 낮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사상 지위는 더 불안정하다. 이처럼 직종 구성의 차이와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가 결합될 경우, 이후 경력 경로에서 불이익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나. 격차의 배경과 구조: 교육 이력과 이주배경 유형

이러한 격차는 이주배경 청년의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표 2). 이주배경 청년의 27.4%가 특성화고를 졸업한 반면 비이주배경 청년은 10.1% (초기 청년인 19~24세 기준으로는 11.9%)에 그쳤다. 모집단 통계인 교육기본통계 기준으로도 특성화고 비중은 15.3%에 그쳐 이주배경 청년(27.4%)과의 격차가 확인하다. 특성화고 중심의 교육 경로는 대학 진학보다 조기 취업을 지향하는

[표 2] 졸업 고등학교 유형: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단위: %)

구분	이주배경 청년 (1) (19~24세)	비이주배경 청년 (2)		모수 (3): 교육기본통계 (2021)
		전체	19~24세	
소계	100.0	100	100	100
일반고	60.6	82.2	80.4	73.9
특수목적고(특목고)	5.3	1.9	1.9	4.9
특성화고	27.4	10.1	11.9	15.3
자율고	5.0	3.7	3.7	5.9
기타	1.7	1.6	1.4	-

주: (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2022) 활용, (2) 청년삶실태조사(2024) 활용, (3) 교육기본통계(2021) 활용, (4) 청년삶실태조사에서 과학교·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는 '특수목적고(특목고)',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대안학교 및 기타는 '기타'로 분류함, (5) 모수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2021. 4. 1. 재학생 기준) 유형별 학생 수를 네 유형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모수의 특수목적고에는 마이스터고가 포함되어 있어 마이스터고를 특성화고로 분류하는 청년삶실태조사와 분류에 차이가 있음. 모수 통계의 기타 유형(각종학교 등)은 조사 항목과 범위가 달라 산출에서 제외함. 모수는 이주배경 학생을 포함한 전체 재학생 기준이나, 고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낮아 비이주배경 분포에 근사함. (6) 청년삶실태조사의 고교 유형 분포는 모수 대비 일반고가 과다 대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박윤경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2; "2021년 교육기본통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의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경향이 강한데, 이는 노동시장 진입 시점과 초기 직종의 선택에서 비이주배경 청년과의 출발 조건 차이로 이어지기 쉽다.

의 축은 이주배경 유형이다. 이주배경 청년 내부에서도 중도 입국자와 국내 출생자 간 격차는 뚜렷하다(표 3). 중도 입국자는 임시근로자 37.8%, 일용근로자 28.9%로, 국내 출생자는 임시근로자

[표 3] 이주배경 청년의 종사상지위: 국내 출생·중도 입국 구분

(단위: 명, %)

	전체(취업자)		중도 입국		국내 출생	
	명	%	명	%	명	%
소계	348	100	45	100	303	100
상용근로자	98	28.2	9	20.0	89	29.4
임시근로자	157	45.1	17	37.8	140	46.2
일용근로자	71	20.4	13	28.9	58	19.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	2.0	2	4.4	5	1.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	1.7	2	4.4	4	1.3
무급가족종사자	9	2.6	2	4.4	7	2.3

주: 취업·근로 상태 결측치 653명 제외.

출처: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박윤경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4.

[표 4] 청년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단위: %, n=1,007명)

청년정책	청년정책에 대해 “알고 있음”	청년정책에 대해 “이용 경험 있음”
국가장학금	88.9	87.7
학자금대출	87.4	21.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9.4	10.3
청년전용창업기금사업	25.7	3.5
청년내일채움공제	35.9	10.3
청년희망키움통장	48.9	4.5
청년저축계좌	37.5	7.1
청년희망적금	59.6	20.5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18.1	6.0
청년행복주택	42.5	5.8
국민내일배움카드	35.2	19.8
청년취업아카데미	17.0	6.4
국민취업지원제도	17.2	16.2
청년창업사관학교	9.7	9.2

출처: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곽윤경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14~115.

46.2%, 일용근로자 비율이 19.1%로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불안정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다만, 중도 입국자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20%인 반면 국내 출생은 29.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비중은 두 집단 모두 약 3분의 2로 비슷하였으나, 중도 입국 청년은 그중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일용직에 더 많이 분포하고 상용직 진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주배경 청년의 청년정책 인지와 이용 경험

가. 청년정책 인지 수준과 이용 경험

이주배경 청년의 청년정책 인지 수준은 정책 유형

에 따라 편차가 뚜렷한데, 교육 분야에 크게 쏠려 있다. 응답자 대다수가 알고 있는 국가장학금(88.9%) 및 학자금대출(87.4%)과 달리 노동시장 진입과 직결되는 정책의 인지도는 현저히 낮았다. 청년창업사관학교(9.7%), 청년취업아카데미(17.0%), 국민취업지원제도(17.2%),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18.1%)가 대표적으로, 모두 인지도가 2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정책 전달 경로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학교를 통해 안내되는 반면 취업·창업·주거 관련 정책은 고용센터나 청년센터, 온라인 포털처럼 학교 밖에 흩어져 있는 창구를 청년 개인이 직접 알아서 찾아야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다. 실제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집단, 곧 순수근로 집단과 비진학·비근로

집단에서 국가장학금 인지도는 각각 71%, 64.3%로 나타나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정책 정보의 단절이 발생함을 보여 준다(곽윤경 외, 2025, p. 114).

인지도와 이용 경험 사이의 간극도 주목할 지점이다. 실제 이용 경험 역시 국가장학금(87.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국민내일배움카드(19.8%), 국민취업지원제도(16.2%), 청년취업아카데미(6.4%) 등 취업·훈련 관련 정책의 이용률은 20%를 넘지 못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인지도 자체가 낮은 정책들이어서 이용이 확산될 여지부터 제한되어 있는 셈이다. 자산 형성 관련 정책 역시 청년희망적금(20.5%)을 제외하면 이용률이 10% 안팎에 그쳤다.

나. 정책 수요와 공급의 괴리

앞서 확인한 인지·이용의 편중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는 이 시기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

지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다. 이주배경 청년의 정책 영역별 수요를 포괄적으로 측정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같은 연령대 비이주배경 청년의 수요 구조를 준거로 삼는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삶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19~24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일자리(47.1%)와 주거(28.5%)이다. 이주배경 청년의 임시·일용직 비율과 저임금 집중도가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주거 정책에 대한 이들의 수요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진로상담·한국어 교육·직업교육 등 대부분의 지원 항목에서 경험률은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필요 응답은 절반을 넘었으며, 진로 영역의 경우 상담 경험률은 31.4%,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4%로 나타났다(곽윤경 외, 2025).

<표 5>에서 주목할 점은 연령별 수요 구조이다. 비이주배경 청년 전체로는 주거 정책(45.7%)이 일자리 정책(33.5%)을 앞서지만, 19~24세에서

[표 5] 비이주배경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 지원

(단위: %)

	일자리 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복지·문화정책	참여 및 권리 정책
전체	33.5	45.7	5.5	14.1	1.2
19~24세	47.1	28.5	9.6	13.8	1.0
25~29세	31.1	51.3	2.8	13.5	1.2
30~34세	22.6	56.7	4.3	15.1	1.3

출처: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곽윤경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8.

는 일자리 정책이 1순위이고, 25세 이후에야 주거 정책(25~29세 51.3%, 30~34세 56.7%)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반면, 교육정책 수요는 19~24세에서도 9.6%에 그친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년의 인지와 이용은 학업 관련 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취업 관련 정책의 인지도는 대부분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초기 청년기는 일자리 정책 수요가 가장 큰 시기임에도, 이주배경 청년의 정책 인지는 수요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교육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시점에 정책 정보가 단절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4 이주배경 청년이 말하는 정책 개선 과제

앞서 살펴본 정보 단절과 접근성 격차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험에서도 구체적인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책 정보에 접근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으며, 노동시장·교육·복지 각 영역의 정책에 이주배경 청년의 여건과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³⁾ 이하에서는 참여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를 정리한다.

가. 정책 접근성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꼽은 어려움은 정책 정보 접근과 활용이었다. 참여자들은 검정고시를 거쳤거나 중도 입국한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한국 사회 제도에 대한 이해 기반이 부족하여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 참여자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년, 특히 그 부모가 이주배경인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과의 제도 이해도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 참여자는 정책 목록을 나열하는 안내가 아니라, 개인 상황에 맞춰 신청 과정을 함께 밟아 주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중도 입국 청년을 위한 다국어 정보 제공도 제안되었다. 초·중등학교 가정통신문에 이미 다국어 번역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청년정책 플랫폼에도 같은 수준의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일자리: 출발선 격차 해소와 이주배경 강점의 활용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구가 제안되었다. 첫째, 구직 준비 단계부터 직업훈련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원의 공백을 메워 달라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한국 노동시장 문화의 이해, 이력서 작

3) 인터뷰는 원 보고서(곽윤경 외, 2025) 제4장에서 수행한 이주배경 청년 대상 심층면접 자료를 이 글의 논지에 맞추어 재작성한 것이다. 면접에는 총 14명이 참여하였는데, 국내 출생 6명과 중도 입국 8명으로 구성되었다. 중도 입국자 중 2명은 한국 국적이 없는 합법 체류자격 소지자(영주권 1명, 구직 비자 1명)였고, 참여자 다수는 25세 이상이었다.

성, 면접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고 하였으며, 구직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직업훈련 이후 창업·취업으로 연결되는 후속 지원이 끊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마쳤으나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이 없어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한 참여자의 경험은 직업훈련의 후속 연계 체계가 미흡함을 보여 준다.

둘째, 이주배경 특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취업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다. 이중언어·이중문화 역량을 가진 중도 입국 청년들은 출신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현지 직원과 한국 관리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에서 법정 통역, 공공기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 등 특정 직군에서 이주배경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공공부문 채용에 다문화 전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고용주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고용주들이 체류자격과 비자에 관한 기본 지식이 없어 합법적 취업 가능자를 채용하기를 주저하거나, 관련 행정 절차를 구직자 본인이 매번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였다. 취업 후에도 조직 내 기성세대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이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다. 언어: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고급 한국어 교육

참여자들은 노동시장 이행에 필요한 언어 역량,

즉 고급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귀화한 중도 입국 청년들조차 학업과 업무에 필요한 수준의 한국어는 여전히 어렵다고 하였다. 한 참여자는 재학 중인 대학의 한국어 교정 서비스가 외국인 유학생 전용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 가족센터에서도 문을 두드렸지만, 해당 센터는 초기 정착 결혼 이주민을 위한 기초 회화 과정만 운영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참여자들은 기초 회화를 넘어 취업과 직무 수행으로 이어지는 학문·직무 목적 한국어 과정이 공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라. 이행 경로 전환기의 생계 및 체류 지원

노동시장에서 일하다가 고등교육 기관 진학을 결심한 청년들은 준비 기간 동안 일과 공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들은 입시 준비 기간만이라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생활비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한국 국적이 없는 청년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체류 자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노동과 학업 사이를 오가는 재이행 경로가 이주배경 청년에게 드물지 않다는 점에서 이행 전환기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이주배경 초기 청년(19~24세)의

노동시장 진입 격차와 청년정책 경험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고용 안정성과 임금 측면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와 이용 경험은 고용이 아니라 학업 관련 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주배경 청년 내부에서도 중도 입국자와 국내 출생자는 서로 다른 장벽에 직면하고 있어 단일한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서 이주배경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나 이 글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제도 설계와 전달 경로 모두에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이 이들에게 실제로 닿기 어렵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 대상 연령을 넓히고 이주배경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앞서 확인한 격차 양상은 제2차 기본계획이 19~24세 이주배경 청년 지원을 명시한 방향이 적절함을 뒷받침한다. 다만 청년기본법상 청년이 19~34세 임에도 25세 이상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의 분석 자료가 24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25세 이후의 격차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노동시장 진입기에 형성된 고용 형태와 직종의 불리함이 경력 경로를 따라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5세를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중도 입국자와 국내 출생자가 직면하는 장벽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주배경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내용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

다. 아울러 이주배경 청년의 상당수가 이미 노동시장에 진출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은 진로 탐색에 머무르기보다 노동시장 정착과 안정적 일자리 유지를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심층 인터뷰에서 확인된 취업·직무 목적의 고급 한국어 교육과 진학 준비 등 이행 전환기의 생계·체류 지원은 지원 내용을 설계할 때 우선 검토해야 할 항목이다. 이중언어·이중문화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취업 경로 개발과 고용주 대상 체류자격·채용 절차 안내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둘째, 학교 졸업 이후 정책 정보의 단절을 해소하는 연계 장치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배경 청년은 학교를 통해 안내되는 장학금·학자금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졸업 후 필요한 취업·주거·창업 관련 정책은 인지도도 낮고 이용 경험도 많지 않다. 이를 해소하려면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가족센터와 청년센터·고용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주배경 청년의 이행 경로에 맞춘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중도 입국 청년에게는 다국어 안내와 함께 신청 과정을 함께 밟아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이주배경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 기반이 요구된다. 청년삶실태조사 등 현행 청년 대상 조사에는 이주배경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이 활용한 자료 역시 24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이주배경 청년 전체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행 청년 대상 조사에 이주배경

식별 문항을 추가하고, 25세 이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醫

참고문헌

- 곽윤경, 나원희, 남윤재, 김주리, 변소연. (2025).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윤경. (2026). 이주배경 청년의 시민적 위치성과 청년 정책의 위계적 구조: 교육 및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33(1), 3-26.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1년 교육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2025).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등록센서스 방식)**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3721>
- 관계부처 합동. (202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1488381&cg_code=
- 정세정, 고혜진, 김기태, 김동진, 김성아, 오옥찬, 이아영, 이해정, 임덕영, 신영규, 하은솔, 한겨레, 김근혜. (2025).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윤정, 전기택,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양계민, 최영미, 황정미.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 (2022).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1기 패널 청소년 12차년도** [원자료].

Unequal Starts: Labor Market Entry and Access to Youth Policy among Young Adults with a Migration Background in South Korea

Kwak, YoonKy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examines gaps in labor market entry and access to youth policy among young adults aged 19–24 with a migration background, a group explicitly identified as a policy target in South Korea's Second Basic Plan for Youth Policy (2026–2030). The analysis draws on microdata mainly from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together with in-depth interviews. Compared with their peers in the general youth population, employed young adults with a migration background were substantially more likely to hold temporary or daily jobs and earned less on average; employment instability was most pronounced among those who had migrated to Korea during childhood or adolescence. Awareness and use of youth policies were concentrated in the field of education access through schools, whereas employment, housing, and start-up programs were little known and rarely used. The interviews pointed to two unmet needs: hands-on help in navigating available policies and sustained support through the transition into stable work. The article recommends extending the eligible age range, strengthening coordination among delivery agencies to provide tailored support, and adding migration-background identifiers to national youth surveys.